

민주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여는

# 민주공월



2022. 여름호

# 165

민주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주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여는

# 민주공원

2022년 여름호 통권 165호

발행처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발행인 이현봉 | 편집인 김홍기  
발행일 2022년 6월 20일 | 간행 기간 | 등록일 2005년 4월 12일 | 등록번호 부산증,바00013  
표지 제호 신명배 | 편집장 김혜선 편집위원 김호민 유반아 이지영(나영) 김현지 윤석현 허주영(유승)  
디자인 중간 051-466-8994 |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19 (우 48901)  
전화 051-790-7400 전술 051-790-7410 누리집 www.demopark.or.kr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SNS로 빠르게 소식을 만나보세요!

- 민주공원 페이스북  
facebook.com/Minjugongwon
- 민주공원 인스타그램  
@democracypark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페이스북  
facebook.com/busanminju
- 카카오톡에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를 검색하여 친구추가하세요.



## 떠내면서

말은 제주도, 사람은 서울로 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름지기 서울로 가야 출세도 하고 잘 살 수 있다는 뜻이었겠지요. 옛말에 틀린 말 없다던가요. 지금도 학업을 위해, 취업을 위해, 보다 안락한 생활을 위해 많은 이들이 '지방'을 떠납니다. 이촌향도 현상은 산업화 시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로 서울로' 가다 보니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역량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권리'를 주제로 펴내고 있는 2022년 소식지 중 여름호는 '지방자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지방자치란 지방의 행정을 지방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에 사는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지방자치제도가 잘 실현되는 것이 지방 소멸을 막는 방법일 것입니다. 여름호 주제 특집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부산지역 선거구 획정 논란,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대안 등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1987년 헌법 개헌을 이끌어낸 6월민주항쟁 35주년을 맞아 여는 기념행사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하며 어린이날 민주공원 놀이터 모습을 지면에 펼치고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노키즈존'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트럭에 짐을 한가득 싣고 이사하는 모습을 표지로 삼았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행복하게 내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일상을 바라며 2022년 여름호를 펴냅니다. 📍

## 목 차

04

주제 특집 30년의 논쟁 - 지방자치체 개혁을 둘러싼 우리 사회 속 논쟁의 역사 \_김호민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부산지역 선거구 획정 \_양미숙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선거구 획정과 제도적 대안 \_박재율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선거구 획정, 그 너머의 대안 \_차재권

16

4대항쟁 5·18민중항쟁 42주년 부산기념식

6월민주항쟁 35주년 부산기념행사

6월민주항쟁 35주년 특집 - 1987년, 뜨거웠던 부산의 항쟁 일지 ③, ④

24

민주공원 부산민주역사길 스토리투어(2) - 시민이 함께 나아간 길 \_정다솜

자연과 함께하는 민주공원, 시민과 함께 키우는 들꽃

어린이날 100주년 맞이 민주공원 놀이터

30

더: 나온 예의 없이 어린이였던 모든 어른에게, \_정은주

무임승차 \_김태훈

34

기억에서 기록으로 소설가에게 기억과 기록이란 \_배갈남

36

모두의 민주주의 처음 겪던 촛불을 기억하며 - 호순이 미선이 사망 20주기

38

민주사랑방

40

민주알림방



## 30년의 논쟁

### - 지방자치제 개혁을 둘러싼 우리 사회 속 논쟁의 역사

김호민 | 민주주의사회연구소

#### 들어가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침내 끝났다. 선거가 끝나자 여당 대승의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4년 전과 동일한 형태로 나타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무력화, 무투표 당선자의 대량 발생에 대한 비판과 우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평론이 나오고 있다. 다만 '지방'에 거주하는 필자가 보기에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4년 전 7회 지방선거처럼 중앙정계로부터 불려온 태풍이 지방을 휩쓴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4년마다 발생하는 중앙정계발 태풍 속에서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오히려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필자는 한국의 지방자치가 35년 전의 6월항쟁이 가져다 준 가장 고귀한 성과물임에도 국회를 중심으로 한 중앙의 정치권은 지방자치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조직적으로 저해했다고 본다. 본 글에서는 지난 30년에 걸친 지방자치제 관련 법률의 성립과 개정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지방자치제가 지금까지 겪고 있는 절곡의 원인을 밝히고 지방자치를 저해해 온 국회를 중심으로 한 중앙의 정치권을 비판하고자 한다.

#### 취약한 기반

한국은 역사적으로 빠르게 중앙집권화를 이룬 국가이다. 또한 그 반작용으로 지방자치의 전통이 취약한 국가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조선왕조의 중앙집권화는 중세 이래 수많은 유형의 봉건영주, 자유도시, 주교령 등 다양한 유형의 집단들이 각지에 웅거한 유럽이나 19세기까지도 각지의 '번(藩)'이 강력한 자치권을 행사했던 일본에 비해 훨씬 강력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의 요소가 전무한 것은

아니었다. 중앙의 조정으로부터 전국 각지에 파견된 조선의 지방관들은 지방에 웅거하는 다양한 유형의 엘리트 집단을 마주해야 했고 그들과 종종 대립하거나 협력해야 했다.

이 점에서 오늘날 한국의 취약한 지방자치제 전통의 원인은 역사 속에서 지방자치제의 요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근대화 과정에서 근대적인 지방자치 제도를 수립하는 데 실패한 것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36년은 한국의 지방자치제 수립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쳤다. 일제는 강점 직후부터 이른바 무단통치를 자행하면서 각 지방의 조선인 결사체에 대해 혹독한 탄압과 감시를 가했다. 이후 일제는 3·1운동을 겪은 뒤 소위 문화통치로 전환하면서 제한적인 형태로 지방의회를 개설했으나 보통선거로 선출되지도 않았고 권한도 취약했던 지방의회들은 조선인들에게 지방자치기구가 아닌 식민통치기구를 강화하는 일개 자문조직처럼 비쳤고 실제로도 그러했다.

해방 후 제정된 재헌헌법은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의 지방자치는 형편없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62년에 시행된 최초의 지방선거는 이승만 정권의 지방장악 의도로 의심받았으며 이는 1964년 이승만의 영구집권을 명문화한 소위 '사사오입 개헌'에 대한 지방의회의 지지선언이 이어지면서 사실이었음이 드러났다. 더구나 이승만 정권은 대부분의 지방단체장을 지방선거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해 관심이 없음을 대놓고 증명했다.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9혁명은 지방자치를 확립할 절호의 기회였다. 실제로 혁명 직후인 1960년 12월에 치러진 지방선거는 지방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최초로 자유선거로 선출함으로써 지방자치제 확립을 이루는 시발점

이 될 뻔했다. 그러나 불과 5개월 뒤 발발한 5·16군사쿠데타는 간신히 수립된 민주헌정을 전복시켰고 쿠데타 세력은 지방의회를 모두 해산시켜버렸다. 근대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수립 기회는 다시 수십 년 뒤로 미뤄졌다.

### 어렵고 외로운 싸움

1990년 12월 15일 오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모인 여야 국회의원들은 한국 정치사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기록될 3개의 법안—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안—을 처리했다. 처리 직후 제1야당 평민당의 김대중 총재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지방자치제 관련 법안 처리를 둘러싼 싸움이 “나의 정치경력 중 가장 어렵고 외로운 싸움이었다”라고 말하며 “87년 대통령직선제나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관철시킬 때보다 더 힘들었다”는 언급까지 덧붙였다.

김대중 총재의 평은 과장이 아니었다. 6월항쟁이 끝난 직후부터 여야는 지방선거제 재실시의 세부 방안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했다. 물론 전두환 독재정권의 여당이었던 민정당조차도 지방선거제 재실시를 온갖 핑계를 대며 미룰지언정 전면적으로 반대하지는 못했다. 6월항쟁이 시대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사실 쿠데타와 광주에서의 학살을 통해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민정당을 앞세워 각종 지방자치제 실시 카드를 국민전환용으로 써먹었고 민정당은 81년과 85년에 치러진 두 차례의 총선에 앞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물론 선거가 끝난 후에 지방자치제는 시행되지 않았으며 실시될 것이라고 믿은 국민도 거의 없었을 것이다.

전두환 자신 또한 ‘지방자치제의 단계적 실시를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신뢰도는 0%에 가까웠다. 사실 전두환은 심심하면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약속한다”느니 “민주주의의 토착화가 착실하게 달성되고 있다”느니 하는 말로 국민들을 웃기는 재주가 있었기에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말로 국민들을 다시 한번 웃기려 했을지도 모른다.

6월항쟁 전의 지방자치제 논의는 기껏해야 독재자의 기만에 불과했으나 항쟁이 성공하자 지방자치제 논의는 지방의 민주화라는 대의를 넘어 정당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되었다. 6월항쟁 전에는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공천방식, 선거구제,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권한 등의 주제가 매우 중

요해졌다. 지방선거를 신속하게 치르고 선출된 의원과 단체장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려 한 야권과 어떻게든 선거는 미루고 권한은 축소하려 한 여권의 대립이 이어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6월항쟁 후부터 1990년 12월 15일에 이르기까지 벌어진 치열한 논쟁은 결국 여권의 우세승으로 끝났다. 야3당이 합의해 통과시킨 지방자치제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로 여권과 정부가 고압적이기도 했지만 1990년의 3당합당으로 인해 압도적인 여당인 민자당이 출현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외로운 싸움’이라는 김대중 총재의 표현은 과장이 아니었다. 결국 여대야소체제하에서 간신히 성립된 지방자치제는 시작부터 내용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지방단체장 선거가 1991년이 아닌 95년으로 연기된 것은 오히려 작은 문제였다. 지방의회는 단체장을 불신임할 권한이 없었으며 중앙정부는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에 대한 임면권을 유지했고 국회는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할 권한을 가졌다. 이러한 요소들 중 일부는 오늘날까지 남아있으며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 지방자치제 개혁의 쟁점과 개혁 그리고 그 결과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 사회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지방선거제도에 대해 잠시나마 논의할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많은 정치개혁 제안이 그렇듯 곧 지방선거제도 개혁 제안은 정치적으로 재단되었으며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온 반대 의견 중 하나가 ‘지금의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논쟁점과 개혁 시도들을 차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던 시기 지방선거제도에 관한 가장 큰 논쟁점은 지방선거 출마지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여부였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은 정당공천에 강하게 반대했는데, 정당공천을 허용할 경우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고 지역주의와 결합하여 지역의 일당독점을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만 놓고 보면 마치 민자당이 2020년대 한국 지방정치의 문제를 앞당겨 본 예언자요, 시대를 앞서간 개혁 자처를 보이지만 실상은 달랐다. 여당의 내심은 지난 수십년간 독재체제와 유착하여 얻은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다는 것에 가까웠다.

일제시대 이래로 각 지방의 다양한 결사체에 대해 중앙

권력의 탄압이 이어지다 보니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지방선거에 출마할만 한 재력을 갖춘<sup>1)</sup> 소위 '지방유지' 대부분은 중앙정치권력에 순종적인 인사들이었다. 그렇기에 야당은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을 금지하면 여당, 정확히는 행정부에 순종적인 '무소속' 인사들로 지방의회가 채워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여당의 주장이 관철되어 1991년 기초의회 선거에서 정당공천은 금지되어 후보 전원은 무소속이었다. 4년 뒤에 이어진 결과는 놀라웠다. 다음 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중 83%가 여당인 민자당에 입당했던 것이다<sup>2)</sup>. 뒤집어 보면 여당과 행정부는 무소속이라는 형태로 1991년부터 4년간 모든 기초의회를 지배했던 셈이다.

그러나 희망적인 사례도 있었다. 재야, 즉 농민·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거나 지지한 기초의원후보들이 당선된 사례가 꽤 있었던 것이다. 특히 보수적인 농촌 지역 기초선거구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지지한 79명의 후보 중 25명이 당선된 것은 상당한 성과였다.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이 허용되었다면 진보적인 풀뿌리 활동가들이 대거 당선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품은 이들은 지금도 적지 않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후보가 주장한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에 지지를 표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정당공천 없이는 보수정당, 정확히는 행정부와 친밀한 '지방유지' 집단이 지방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이어진 96, 98, 2002년 지방선거에서도 진보적인 기초의원들의 수는 상당했지만 결코 '지방유지' 출신 의원들을 압도하지는 못했다. 진보적인 무소속 기초의원들과 진보정당 간의 협력도 한계가 있었기에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은 창당 직후부터 기초의원 정당공천 허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지방선거제도를 둘러싼 초기의 논쟁들은 2005년 6월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귀결되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정치개혁'이라고 명명한 개정 공직선거법은 기초의원 정당공천 허용, 기초의회선거에 한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의원의 유급화, 선거연령 하향 등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었고 상당수는 진보정당과 학자들이 요구해온 것이었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오늘날 당시의 개혁을 돌이켜보면 거칠게 표현해서 개혁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요소들은 현실로 나타나고 가장 긍정적인 요소들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먼저 정당공천 허용으로 인한 폐해가 현실이 되었다. 사실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에도 절대 다수 기초의원들은 자율성 상실과 소수 거대정당의 기초의회 독식을 가져올 것이라며 정당공천제만큼은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려는 현실이 되어 2006년의 제4회 지방선거에서 제1, 2당은 전국 기초의원 당선자 중 77.9%를 쓸어갔다. 이 비율은 계속 올라가서 2014년에는 88.6%, 2018년에는 90.5%, 2022년에는 94.6%에 이르렀다.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인한 기초의회 다양성 강화 시도가 전국의 광역의회들이 자행한 4인 지역구 쪼개기 전술로 무력화된 것이 컸다. 무투표 당선자도 계속 증가해서 2006년 제4회 지선 당시 광역, 기초를 합쳐서 48명이던 무투표 당선자는 이번 8회 지선에서 508명으로 불어났다. 심지어 중대선거구제로 선출되는 기초의원조차 2,988명 중 393명이 무투표 당선자다.

### 대안은 있는가?

제8회 지선이 끝난 지금 지방선거의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 확립을 위해 필수적인 다양성의 증가는 고사하고 투표의 비례성 자체가 무너진 지 오래이며 이제는 무투표 당선자까지 급증해 선거 자체가 무력화되고 있다. 대안은 없을까? 솔직히 필자도 모른다. 다만 지난 30년간 지방선거 개혁을 둘러싼 쟁점들을 시민사회가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과거의 역사를 둘러볼수록 압담함은 더 커졌지만 혹시 알겠는가? 그 속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말이다. 📌

- 1) 2006년 지방선거 전까지 지방의회 의원들은 '무급'이었다! 이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지방유지 출신 의원들조차 견디기 힘들었기에 차츰 의원 '활동비'가 불어나 급어처럼 지급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무급' 체제는 재산이 적은 청년층이나 풀뿌리 활동가의 출마를 어렵게 했으며 나아가 '법대로 살면 가난해지는' 지방의원의 부패를 촉진하는 원인이었다.
- 2) 정당 입당을 선택한 의원들만 놓고 볼 경우 민자당 선택비율은 무려 99%였다!

##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부산지역 선거구 획정

양미숙 |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2018년 3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부산시 구·군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의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조개어 수정가결해 본회의에 넘겼고 3월 16일 본회의에서도 부산시의회 다수당인 자유한국당은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기획행정위원회가 가결한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조개 선거구획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초의원은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은 지역 69명 비례 9명 합쳐 78명, 민주당은 지역 87명 비례 16명 합쳐서 103명, 무소속은 1명으로 양당이 부산지역 기초의원을 싹쓸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결과를 초래했다.



2022년 4월 27일  
부산시의회에서  
부산광역시 자치구·군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다.  
부산시 구·군선거구  
획정위원회 안을  
수정한 안이었다.  
(출처: 오마이뉴스)

2022년 4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부산시 구·군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 18곳, 3인 선거구 27곳, 4인 선거구 10곳을 도입하는 안을 올렸는데,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는 2인 39곳, 3인 25곳, 4인 1곳으로 수정해 본회의에 올렸고 본회의에서는 수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3인 선거구가 지난 2018년보다 늘어나긴 했으나 정당의 문제를 떠나 의회의 다양한 구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선거구획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결과는 국민의힘은 지역 88명 비례 16명 합쳐 104명, 민주당은 지역 68명 비례 9명 합쳐서 77명, 무소속은 1명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석수만 바뀌었지, 양당이 부산지역 기초의원을 2018년과 똑같이 차지하였다.

이런 선거구제 아래에서 2018년 당선된 기초의원들은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했을까? 200명에 가까운 기초의원 중 구정을 감시 견제하고 주민을 위한 활동을 하는 의원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기초의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연제구, 동구, 사하구, 기장군, 중구 대부분 지자체에서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보인 행태는 지역민을 기만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토론과 합의라는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마저 저버린 것이었다. 국회의원의 개입, 상임위원 조개기, 제명된 의원 밀어주기, 당론으로 결정된 사항을 어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다른 정당과의 야합이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의원과 정당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또는 주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장, 부의장,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자리에 따라 주어지는 업무추진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이뿐이 아니라 서구 의회의 한 의원은 위탁사업의 심사 위원 명단을 유출하고, 또 서구의 한 의원은 서구에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뒤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었고 자녀가 취득한 부동산의 주변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구의회 5분 발언까지 했다. 금정구의 한 의원은 폐기물 업체의 전무이사로 있으면서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독려하는 발언을 구의회에서 하거나 실제로 금정구청이 이 의원과 관련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여러 건 체결하기도 했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한 의정활동, 겹직으로 임금을 받으면서 하는 의정활동이 구민을 위한 활동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기초의회에서 발생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런 문제들이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의회가 구성된 후 점차 사라져야 하는 구태임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거나 오히려 광범위하게 더구나 변변하게 자행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시민이 선거를 통해 기초의회의 의원을 뽑지 않기 때문이다. 유권자인 시민이 투표를 통해 기초의원들을 뽑는다면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정치개혁 부산행동이 부산광역시의회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부산지역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다음 선거 때 뽑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위와 같은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기초의원들은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뽑히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공천에 의해 이미 의원으로 내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지역 의제 중심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정치가 아닌 중앙 정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지역 정치 때문이고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아 온 정치 제도의 결과이다.

지방선거는 주민의 삶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꾼을 뽑는 선거이지만 중앙 정치와 정치 프레임에 갇혀 지역의 문제는 외면되고 유권자들은 소외되어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저조하고 선거의 결과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중심으로 반복해 재구성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구·군 선거구를 3인, 4인을 뽑는 중대선거구로 확정하는 것이다. 이는 제도화되어 있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점차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린 3인,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추이지만 선거구 획정안은 부산시의회를 거치면서 3인 선거구는 축소하고 4

인 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쪼개지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또한 3인, 4인 선거구로 확정되더라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복수 공천을 하면서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훼손하게 되고 다양한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유권자의 선택이 아니라 양당의 공천만 받으면 기초의원으로 당선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을 위한 의정 활동이 아닌 자신의 이해와 이익을 위해 또는 정당과 국회의원에 줄을 서기 위한 활동을 반복하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 주민의 심판과 선택으로 기초의원을 뽑고 주민의 의사를 구청과 의정에 더 많이 반영해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복수 공천을 배제한 제도로 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이 하나의 방안이다. 지역의 정치가 더 중앙 정치에 좌지우지되지 않기 위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려면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정치 제도의 개혁이 절실하다.

부산시민은 언제나 부산시민을 위한 지역 정치를 하는 지역 정치인을 우리 손으로 뽑아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풀뿌리민주주의가 정착한 부산에서 살게 될까! 

##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선거구 획정과 제도적 대안

박재욱 |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1991년 지방의회 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을 넘기고 있다.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해당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다스림을 대신하는 지방의회 구성은 지방자치 존립과 성공의 열쇠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 ①항에 근거해 구성되는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유권자의 표가 지방의회 구성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가.

지난 6.1 지방선거의 과정과 결과는 한 세대를 넘긴 우리의 지방자치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새삼 확인해 주었다. 주민의 의사, 유권자의 표는 한편으로는 과잉대표로, 또 한편으로는 과소대표로 올바른 지방자치의 모습이라고 하기는 민망하다. 이는 역대 선거에서 반복되는 모습으로 유권자들의 관심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전국 50.9%, 부산 49.1%인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낮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기초의회 선거를 보자. 전국적으로 민주당 1,384명, 국민의힘 1,435명, 진보당 17명, 정의당은 7석이다. 부산 역시 전체 182석 중 민주당 77석, 국민의힘 104석, 무소속 1석으로 지난 선거와 1, 2위 순위만 바뀌었을 뿐 양당이 독식했다.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의 4개 소수 정당이 12곳의 지역구에 단일후보를 내세웠지만 단 1명도 진출하지 못했다. 기초선거에 정당공천이 도입된 2006년 0명, 2010년 17명, 2014년 1명, 2018년 0명이 소수 정당의 성적표다.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부산시 선거구획정위에서 2인 선거구를 44곳에서 18곳으로 줄이고, 3인 선거구

를 23곳에서 27곳으로 늘이고, 4인 선거구를 10곳 신설하는 안을 제출했지만 최종 의결단위인 시의회에서 각 각 39곳, 23곳, 1곳으로 결정, 후퇴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35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유일한 4인 선거구인 기장 다선거구에서는 국민의 힘에서 3명이 당선되었다. 후보 등록일을 보름 앞두고 선거구가 획정되는 바람에 소수 정당들이 대비하지 못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조직력을 앞세운 거대 정당의 복수 공천을 통한 독주를 막을 수 없는 구조다. 기초의회는 풀뿌리 생활자치, 주민자치의 전당이다. 국회나 광역의회의 대의정치 기능을 보완하는 기초의회는 좀 더 주민밀착 직접 민주주의형 소통의 장이다. 성, 연령, 계층, 직업에 관계없이 여성, 노인, 청년, 장애인 등 다양한 주민들이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2인 선거구를 없애고 3-5인의 선거구로 바꾸어야** 한다. 동시에 **특정 정당의 한 선거구 복수 공천을 금지**해야 한다. 이것이 소수 정당의 진출, 다양한 주민의사의 반영이라는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다. 아울러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선거구 획정 권한을 민간 인사로 다수로 구성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부여하여 객관성, 중립성을 높여야** 한다. 선거 때마다 낙장 선거구 획정으로 비판받는 국회의 시의회 선거구 획정 권한 역시 마찬가지다.

광역의회는 또 어떤가. 전국적으로 국민의힘 540석, 민주당 322석, 진보당 3석, 정의당 2석이다. 부산은 지역구 42곳, 국민의힘 전원 당선에 비례대표 3석까지 45석, 민주당 비례대표만 2석으로 총 47석 중 45석을 특정 정당이 차지했다. 정의당 등 소수정당들은 명함도 내밀지 못했다. 지난 2018년 선거 때는 민주당이 지역구 38석에 비례대표 3석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단체별 개요 결과

로 41석을 차지, 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득표율에 관계없이 1등만 하면 다 가져가는 승자 독식의 지역구 중심 선거제도가 상대적 소수 유권자들의 다양한 의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셈이다. 광역의회 선거구의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구와 바로 연동되어 있어 현재의 소선거구제 자체를 바꾸기 어렵다. 거기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연동하여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한다고 해도 지역구 선출 중심의 선거제도에서 유권자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는 정확한 비례성 보장이 불투명하다. 광역의회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구 범위가 넓어지면 소수 정당 후보자의 진출보다 조직력을 가진 거대 정당의 위성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일단 당선되면 거대 정당으로 입당하는 식이다. 그래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대안이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

부 유럽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전면 비례대표제 방식은 각급 선거 전체를 한 묶음으로 바꾸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관통합형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방식으로 우리와 같이 단체장과 의회를 별도로 선출하는 기관분립형 체제에서 그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 그래서 광역의원 수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로 선출하되, 밀실 공천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권자가 정당과 함께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볼 수 있다. 지난 총선 때 준준정당명부 비례대표 형태로 대폭 축소되고, 위성 정당 출현으로 왜곡되었던 국회의원 선거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과 연계해 개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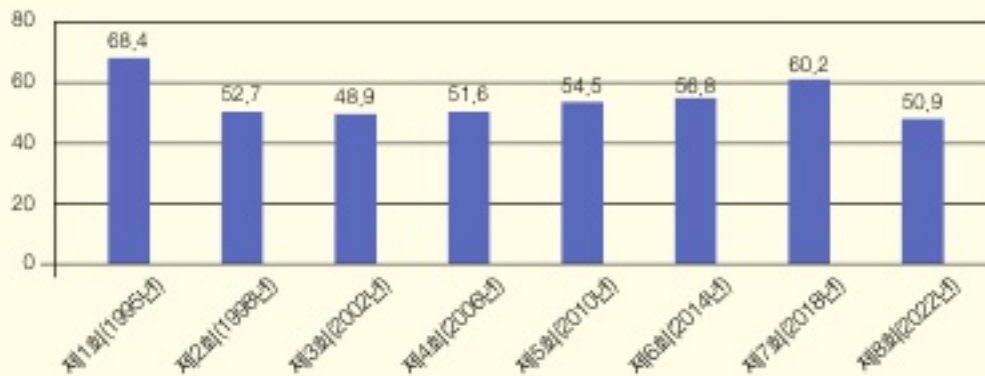
이번 지방선거 과정은 4년 전 선거 과정과 판박이었다. 여당은 '국정 안정, 힘 있는 후보', 야당은 '정부여당 견제'의 구호를 되풀이했다. 다만 4년 전의 여당과 야당이 바뀌었을 뿐이다. 구체적인 지역의 과제, 주민의 생활의제가 장점이 되고 이 과정에 유권자들이 참여하여 투표로 이어지기보다는 중앙정치, 중앙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대립과 갈등이 압도하는 선거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없다. 여전히 공영방송을 통해 서울 시장과 경기도 지사의 후보 토론을 투표도 하지 않는 다른 지역 유권자들에게 보라고 강제(?)하는 수도권 중심의 집권적 정치, 선거구조로는 올바른 지방자치의 실현이 난망하다. 분권과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에서부터 선거 과정과 결과에 이르기까지 명실상부 선진국에 걸맞은 제도개선과 체제구축이 절실하다. 📌

#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선거구 획정, 그 너머의 대안

차재권 |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결국 예상했던 바대로 여당인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50.9%의 투표율은 모두의 예상을 빗나갈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역대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처음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던 1995년 68.4%에서 시작해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역대 최저인 48.8%를 기록했고, 이후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다시 후 상승 추세를 이어왔으며,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마의 60% 벽을 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낮은 투표율은 우리나라 풀뿌리 민주주의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보여주는 불길한 징조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추이



무엇이 이런 낮은 투표율을 이끌어 내는 데 일조했을까? 이런 저런 이유를 들먹일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합리주의적 투표선택론에 근거한 설명이 그나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합리주의 투표선택론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앤서니 다운스(Anthony Downs)는 합리적 유권자는 자신의 한 표가 갖는 효능이 낮다고

판단되면 투표장엘 가지 않고 기권을 선택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투표장에 가서 찍어 봐야 어차피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이니 발품만 팔 뿐이라는 심리가 유권자의 발길을 돌리게 만든다는 논리는 선거정치의 금과옥조로 여겨졌다. 대통령 취임일로부터 3주 남짓 지난 시점에 치러진 지방선거이니 여당의 압승은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었고 여야 정당 가릴 것 없이 지지자들에게 투표의 효능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으니 저조한 투표율은 예견된 결과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대 대선의 후보토론회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정치개혁 이슈들이 대선 이후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정당들에 의해 강력히 추진되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적용되었다면 투표율은 어땠을까? 제도 변화가 가져오는 효과를 당장 예측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제도 변화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리라 가정하는 것도 무리한 면은 없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같은 일련의 선거제도 개혁이 적어도 지방선거의 흥행 효과를 배가하는 데는 크게 한 몫했을 것이란 점이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소수정당들이 유효한 의석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 아래 필사즉생의 각오로 선거에 임했을 것이고 그들로부터 정치적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한 거대 양당의 노력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소수정당과 기득권 거대 양당 간의 그러한 불꽃 튀는 싸움은 신박한 정책 아이디어들을 끌어내었을 것이고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것이며, 지방선거의 공간이 정책공약의 쇼핑몰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당연히 투표율 상승이라는 선물이 덤으로 주어졌을 것이고 마침내 우리나라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개화기를 맞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다당제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정당 기자회견 모습  
 ※ 출처: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92> (검색일: 2022.6.2.)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아름다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나리오가 우리에게 현실이 되지 못했다. 거대 양당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정치개혁의 요구에 대해 보란 듯 입을 닫아 버렸다.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의 일부 개혁 세력이 대선에서 약속했던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전면적인 정치개혁 이슈를 다시 꺼내 들긴 했으나 그 과정은 미미했고, 정치권은 이내 지방선거의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정치개혁의 요구를 회면하고 말았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지역주의의 망령이 지방선거에서 다시 살아나는 현장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아픔이다. 국토를 영호남으로 확연히 구분하는 빨강과 파랑의 극적인 대비는 다시금 대선과 지선으로 이어지는 거센 정치 경쟁의 풍랑 속에 좌초되었던 선거구 획정 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승자독식의 웨스터민스터(Westminster) 스타일의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를 선거제도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기초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채택되어 그나마 소수정당 후보의 기초의회 진출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2인 선거구 확대와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최소 기준 적용 등 기득권 거대 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도 인해 소수정당에 허용된 지방정치의 공간은 좁기만 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 과정과 결과는 우리의 지방정치가 얼마나 기득권 중심의 체제가 강고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비율이 3 대 1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20대 대선의 거센 회오리바람 속에 지방선거 선거구 조정은 선거구 획정의 주체인 국회의 태만으로 인해 지방선거가 목전에 이를 때까지 이렇다 할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선거구가 어떻게 나뉘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현실이 되고야 말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15일에는 공직선거법과 세종시,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의회의원 정수와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광역의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었고, 결국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전체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결론으로 끝을 맺었다. 한 광역의회의원 지역구에서 기초의회의원을 4명 이상 선출하게 될 때 2개 이상의 지역구로 분할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은 삭제되었고, 일부 지역에서 기초의회의원 지역구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에서 100분의 14를 100분의 20으로 변경하고,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인구가 5만 미만이면 최소 1명, 5만 이상이면 최소 2명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문제는 법 개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을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각 광역의회의 선거구 획정 과정과 결과에 있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읽기에 몰려 꺼내놓은 광역의회의 선거구 획정의 결과는 우리 모두를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기초의회 선거구가 대부분 2인 선거구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거대 양당의 썩팍이 선거구 획정에 대한 지역 민심의 파가운 비판이 세도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너무도 당연히 진보당, 정의당 등 소수정당들이 기초의회에 단 한 석도 갖지 못하는 소수정당의 궤멸을 가져왔다. 이 목불인견의 정치적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

먼저 **의회제도 개혁**을 통해 국회를 현오와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관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 중심의 국회 운영 기초를 강화하고 당론 강요를 금지하는 등 국회의원의 입법 자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의사운영과정에서의 정당 간 갈등 완화를 위한 협의기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에 항의하는 소수정당  
출처: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6293> (검색일: 2022.6.2.)

구를 확대하고 현행 20명으로 되어 있는 국회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10명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소수정당의 의정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임기 제한(term limit)을 두어 동일 지역구 3선 제한 및 5선 연속 출마를 금지할 필요가 있는데, 정당 간 합의가 어렵다면 개별 정당 차원에서 당헌과 당규 개정을 통해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제한하고 구급 의원에 대한 수당 지급을 금지하거나 특별비에 대한 면세를 폐지하는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과감한 개혁 조치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당제도와 선거제도 개혁** 또한 필요한데, 기존 양대 정당 중심의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는 극약 처방이 요구된다. 국민공천의 제도화에 바탕을 둔 상향식 공천제도는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선거제도 차원에서 개방형 정당명부식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만, 정당 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면 개별 정당 차원에서라도 비례대표 공천에서 지역합당제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당 내부의 민주화도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강제적 당론 적용을 금지하는 등 당내 의사결정권의 대표성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행 정당법 상의 중앙당 수도 소재 조항을 과감히 삭제하고 '천명 이상 당원을 가진 5개 이상 시도당 필수 구성' 조항도 삭제함으로써 지역정당 설립이 언제든지 가능케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합의제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다당제적 정당체계 구축을 지향해 나가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

# 오월, 진실의 힘으로! 시대의 빛으로!

## 5·18민중항쟁 42주년 부산기념식

부산민주주의행동 개막식을 겸한 5·18민중항쟁 42주년 부산기념식이 5월 18일 오후 7시부터 서면 주디스타워 거리에서 열렸습니다. 부산민주주의행동 추진위원회, 5·18민중항쟁행사위원회, 5·18기념재단이 공동주최하고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주관했습니다.

엔티미터를 통해 '당신의 5·18을 이야기 해주세요'를 묻고 오가는 시민 분들이 참여 해주셨습니다. 5·18민중항쟁의 진상을 알리는 영상을 함께 보고, 부산민예총 품물굿위원회가 민주주의의 '힘'을 알리며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김민주 청년예술가가 시낭송에 이어 민중의례를 진행했습니다. 이행봉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과 김종세 부울경 5·18민주유공자회 회장이 연이어 기념사를 했습니다.

부산민주주의행동 추진위원회 소속 청년들이 무대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무대 아래 참가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힘차게 제창했습니다. 청년들을 뒀고 나타난 '국가보안법'은 5·18민중항쟁을 왜곡하고 폄훼하며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적폐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독재정권의 폐단이 청산되지 못하고 이어져오며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5·18민중항쟁의 진혹한 참상을 알리는 청년 예술가들의 무용 공연에 이어 신진문화예술행동 홍이 자주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노래했습니다. 독재정권에 저항한 민주주의의 힘이 유혈로 이어진다는 '오월에서 유혈로' 영상으로 5·18민중항쟁 42주년 부산기념식과 부산민주주의행동 개막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가보안법 폐지 예술행동



부산민예총 풍물굿위원회



국가보안법 폐지 예술행동

# 오월, 진실의 힘으로! 시대의 빛으로!

“ 42년 전의 그날, 1980년 5월, 전무한 군부 정권의 무자비한 국가폭력에 저항하고, 주먹밥을 나눠 먹으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고, 진정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불의에 맞서는 저항 정신, 대동세상을 향한 연대와 공동체 정신, 평등과 평화 위에 싹트는 자주와 민주 의 정신이 바로 우리가 이어가야 할 오월정신입니다.

오월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비단 기억과 기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행해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폭력과 불의에 맞서 진실을 밝혀내고, 공동체를 지키며 연대를 실천해나가는 것이 오월정신을 함으로 계승하는 것입니다.”

- 이철봉 (사부선민주협쟁기념사업회 이사장 기념사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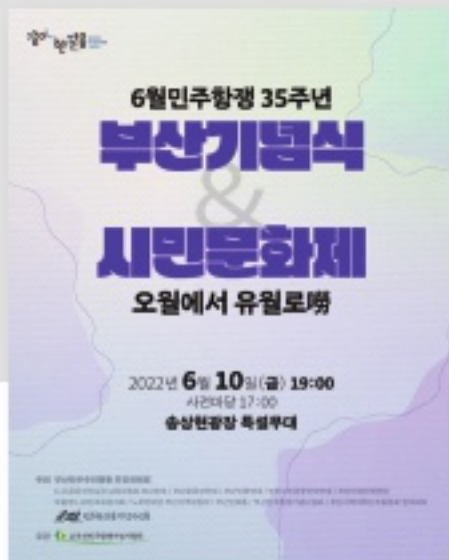
인생을 위한 행진곡 제창



## 6월민주항쟁 35주년 부산기념행사

## 6월민주항쟁 35주년 부산기념식 &amp; 시민문화제 오월에서 유월로

- 6월 10일(금) 오후 7시(부스 및 사전마당 오후 5시),
- 송상현광장 진디마당



6월민주항쟁 35주년을 맞아 6월 10일 오후 7시부터 송상현광장 특별무대에서 <6월민주항쟁 35주년 부산기념식&시민문화제 오월에서 유월로>를 개최했습니다. 부산민주주의행동추진위원회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공동주최하며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주관했습니다.

부산기념식과 함께 열리는 시민문화제 오월에서 유월로라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떠들썩했던 6월, 주권을 되찾는 축제와도 같았던 그날의 기억을 오늘에 다시 펼쳐고자 했습니다. '주권과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5개의 시민공연팀이 무대에 있습니다.

특별무대 앞으로는 오후 5시부터 부산민주주의행동추진위원회 소속 연대 단체들의 부스도 운영했습니다. 환경, 탈핵, 주민자치, 통일, 성평등 등 다양한 민주주의 의제로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 6월민주항쟁 35주년기념 부산지역 6월민주열사 추모의 벽 제막식

- 6월 10일(금) 오후 4시
- 민주공원 추념의 장(넙기림마당)

민주공원 추념의 장(넙기림마당)에는 부산지역 6월민주열사, 이태춘, 박종철, 황보영국 세 분의 추모비가 있습니다. 이태춘 열사의 추모비는 6월민주항쟁 20년을 기념하며 2007년 설치, 박종철 열사와 황보영국 열사의 추모비는 2010년 6월민주항쟁 23주년에 설치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에 추모비가 바래기도 하여 추념의 장 울타리 벽에 추모의벽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추념의 의미와 함께 '계승', '존경'의 의미를 담아 '늘빛드레'라는 순무리말 이틀을 지었습니다.

6월 10일 오후 4시 6월민주열사 세 분의 유족을 모시고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추념의 장에 있는 추모조형을 민주주의 이틀과 함께 울타리 벽에 새긴 열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정신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 〈민중미술 2022- 출렁일렁 꿈들거리는〉

섹션 1 5월 1일(토) - 7월 31일(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월요일 휴관

섹션 2 8월 20일(토) - 10월 23일(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월요일 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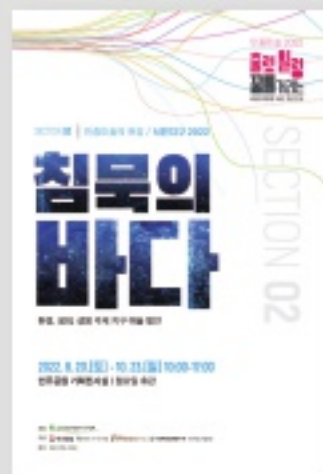


6월민주항쟁 35주년 기념 전시 〈민중미술 2022- 출렁일렁 꿈들거리는〉이 민주공원 집은펼쳐보임방기획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민주공원, 부산민예총 시각예술위원회, 민족미술인협회 울산지회, 시민족미술인협회광주지회, 생명평화미술행동이 공동 주관합니다.

섹션 1 민중미술 소장작품전 〈근대! 근대?〉는 민주공원이 소장하고 있는 민중미술 작품 중 45점을 선별하여 전시장에 풀어보았습니다. 동학농민운동부터 군부독재에 저항한 모습이 담겨 있는 민중미술 작품으로 보는 한국근현대사! 홍성달, 이상호 작가의 초기작 등 회귀본부터 한겨레신문 창간호 제호

뒤에 삽입된 작품 등 쉽게 만나지 못하는 작품을 한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주공원 소장 민중미술 작품에서 따온 스탬프로 자신만의 민중미술 판화 작품도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섹션 2 민중미술의 현장/식민지구 2022 〈침묵의 바다〉는 환경, 생태, 생명을 주제로 지구 예술인들의 발언을 담은 전시입니다. 환경 문제를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요즘, 예술인들이 전하는 생명의 메시지를 만나길 기대해봅니다.



## 6월민주항쟁 35주년기념 학술심포지엄 "6월민주항쟁과 우리 시대 민주주의의 과제"

- 6월 30일(목) 오후 1시
- 유라시아플랫폼 109호

"6월민주항쟁과 우리 시대 민주주의의 과제"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김누리 교수가 '6월민주항쟁과 우리 시대 민주주의의 과제'를 기조발제 합니다. 전병유 교수가 '한국의 불평등 구조와 청년 세대'를, 이현재 교수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한 페미니즘의 제언'을, 주윤정 교수가 '한국사회 차별/배제의 어젠다'를, 김지혜 교수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지위'를 발표합니다. 정수남 교수, 김인선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며 종합토론의 좌장은 진시원 교수가 맡아 이끕니다. 📍

## 1987년, 뜨거웠던 부산의 항쟁 일지

— 6월민주항쟁 35주년 특집

### ③ 4.13호헌조치와 국민적 저항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인해 일어난 국민적인 열기는 2.7추도회와 박종철 열사 49재에 열린 3.3평화대행진을 계기로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4월 13일 전두환은 TV와 라디오로 전국에 특별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평화적인 정부 이양과 서울올림픽 등 국가 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개헌 논의를 지양하고 민정당의 후임 대통령 후보를 결정한다. 사회 혼란을 조성하는 폭력과 좌경세력은 엄정히 다스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계언론들은 4.13호헌조치를 ‘안정 위한 중대한 용단’,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식으로 미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종 정부기구를 통한 호헌지지 공작에도 불구하고 4.13호헌조치는 즉각 거센 반대여론을 일으켰습니다.

각계각층에서 호헌조치를 반대하는 성명서와 서명, 농성이 줄을 이었습니다. 대한변협이 재빨리 호헌반대성명서를 발표한 데 뒤이어 전국의 신부, 수녀들이 4.13호헌 조치 철회를 위한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관계언론에 분통이 터진 이들은 TV를 부수고 때문에 ‘신문사철’ 글씨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부산민주시민협의회(부민협) 부회장으로 2.7추도대회 참여 후 구속된 바 있는 김희로 선생은 “박종철 사건이 6월항쟁의 원인이 되는지는 몰라도 6월항쟁의 불을 당긴 직접적 원인은 4.13조치이다. 호헌조치 이후 지식인들과 제도권아당이 민주운동에 대거 동참하는 것을 보고 이제가 뒤집어지는구나 하고 직감적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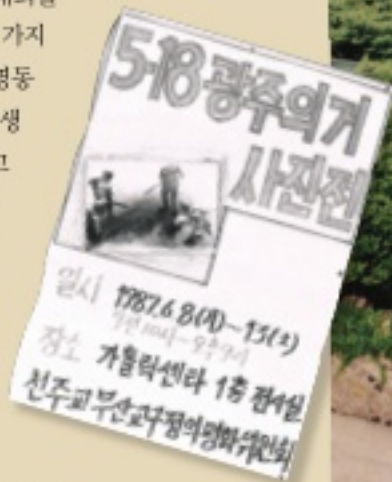
### ④ 항쟁의 전야 - 5월의 분노

4.13호헌조치가 있던 날 부산에서는 연일 ‘부산대 사태’로 불리는 부산대 학원민주화투쟁(학민투)으로 들끓었습니다. 연일 만여 명의 학생들이 교내를 돌며 시위하고 총장실을 점거했습니다. 시위의 발단은 대학신문사를 학교당국이 무리하게 장악하려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5월 13일 부산시경은 총장실 점거와 시위지 발취 등 학생들의 행동이 민중항쟁유발을 위한 전력이라고 분석하고 시위에 가담한 주동 및 적극 학생 전원을 구속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속된 학생들의 단식투쟁 끝에 1만 5천 명의 학우들이 모인 가운데 총장의 ‘승복’을 받아내며 학민투를 승리로 끝냈습니다. 부산대 학민투의 승리는 6월항쟁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고리를 이루게 됩니다.

잔인한 오월, 광주 진상규명과 반정부시위의 목소리가 광주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개혁을 주장하는 민주당을 견제하고 '호헌반대', '독재타도'를 외치는 학생들을 탄압함으로써 6월 10일 노태우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는 전당대회를 축제 속에 치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월 18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광주사태 희생자 추모미사'에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진상이 조작되었다'는 충격적인 성명이 나왔습니다. 민중은 경악했고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박종철과 4.13호헌'이 돌은 87년 상반기 내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지속적으로 촉각시켜 마침내 거대한 6월항쟁의 불을 지피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4.13호헌조치 이후 부산에서는 호헌반대 열기가 고조되었습니다. 부민협은 기관지 「민주시민」과 시국선언문 유인물을 통해 4.13호헌조치의 부당함을 알렸습니다. 그러던 5월 17일 황보영국 열사가 서면 거리에서 '독재타도'를 외치며 온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했고 끝내 숨졌습니다. 참담한 소식은 「민주시민」에 실려 시민들에게 퍼졌습니다. 부민협을 비롯한 부산의 재야단체들과 시민 학생 노동자들이 모여 '고 황보영국 장례식'을 엄숙히 거행하며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기로 결의를 다졌습니다. 부산가톨릭센터에서는 '5·18광주의거사전전'이 6월 8일부터 열려 3만 명 이상의 부산시민이 전시를 찾았습니다. 참혹한 진실 앞에 부산시민은 분노했습니다.

전국적 전민항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며 5월 27일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이끈바 국본이 발족합니다. 발족식에서 "진정 국민이 이 땅의 주인이 되는 민주사회를 건설하고 민족통일을 성취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부산에서는 5월 20일 국본의 전신이 되는 '호헌반대 민주헌법쟁취 범국민운동 부산본부'를 발족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결성이었습니다. 결성을 마친 국민운동본부는 6월 10일, <6·10 >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를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날은 민정당 전당대회를 열어 노태우를 대통령 후보로 옹립하는 날이었습니다. 



3 5·18광주의거사전전 포스터  
4 5·18광주의거사전전을 보기 위해 몰린 민파

## 부산민주역사길 스토리투어 ② - 부산진구·동구 두 번째 길 시민이 함께 나아간 길



정다솜 | 민주공원 기념관교육



### 민주헌법쟁취범국민운동 부산본부 사무실 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5

범내공역 1번 출구 앞 건물 4층에는 과거 부산시민들의 중심에서 6월민주항쟁을 이끈 민주헌법쟁취범국민운동 부산본부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1985년 부산에서는 이미 부산민주시민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결성되어 민주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1987년 5월 20일, 12월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부산민주시민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산의 시민사회단체, 종교, 학생, 노동계 등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 국본 부산본부를 조직하였습니다.

### 범일동 구름다리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62-712

범일동 구름다리 일대는 4·19혁명의 주 무대가 되었던 곳입니다. 특히 경남공고, 데레사여고, 부산상고, 동래고 등 학생들의 연합시위가 이곳에서 펼쳐졌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의 행진을 막기 위해 옛 삼일극장 앞에 다섯, 여섯 겹의 저

지선을 쳐 도로를 차단하고 학생들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지금은 이곳에서 4·19혁명의 흔적을 찾기는 힘들지만 2001년 개봉한 인기 영화 '친구'의 촬영지로 유명세를 떨치며 종종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 부산YMCA(부산기독교청년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9

해방 직후인 1945년 10월 28일 설립된 부산 YMCA는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마다 시민사회의 주축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1950년대에는 한국전쟁 피란민 구호사업과 의료봉사를, 1960년대에는 청소년 운동을 70~80년대에는 부산지역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의 큰 축을 담당했으며 1990년대에는 시민사회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지금도 생명, 평화,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수남경로당·문화센터(옛 부산시경 대공분실)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89번길 17

대공분실은 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설치한 기관으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체포하여 조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군부독재정권이었던 제3공화국부터 제5공화국 사이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연행하여 고문하고 그들에게 조작된 자백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인권침해의 대명사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부산시경 대공분실이었던 이곳은 과거 겉으로는 내외문화사라는 간판을 내걸고 미국문화원 방화사건 관련자, 부림사건 관련자 등 부산의 민주운동가들을 혹독하게 고문한 곳입니다. 📍



동익대학교



범일동 구룡다리



초당 2동



- 사진 위에서부터
- 민우헌법정취범국민운동 부산본부 사무실 터
  - 범일동 구룡다리
  - 부산 YMCA
  - 수남경로당 문화센터



## 자연과 함께하는 민주공원, 시민과 함께 키우는 들꽃

민주공원 곳곳에는 풀과 꽃, 나무가 많습니다. 들꽃은 말 그대로 들에 피는 꽃, 야생화를 이룹니다. 이 꽃 저 꽃 어우러지며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을 보면 마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네 민주세상과 닮았습니다.

특히 1999년 민주공원 개관 당시 조성한 들꽃나무들(수목원)에는 다양한 들꽃과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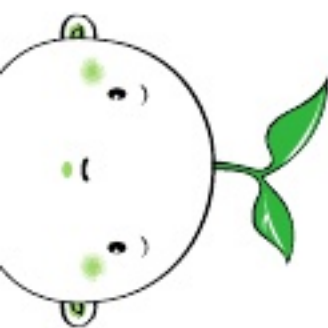


름드리 나무가 있습니다. 더운 날이면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생태체험 프로그램으로 민주공원을 찾아 들꽃을 관찰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절로 미소 짓게 합니다. 나무 중에는 1999년 민주공원 개관식에 참석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식수한 기념식수 두 그루도 나란히 서 있습니다.

지난 4월, 하늘이 맑은 봄날 민주공원의 새로운 공간인 들꽃자드락 개소식을 했습니다. 쉬운길 입구 옆에 있는 들꽃자드락은 (주)상자연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가 전달한 사회공헌 기금으로 조성한 공간입니다. 자드락은 나지막한 산기슭의 비탈진 땅을 뜻하는 순우리말입니다. 들꽃자드락은 이름 모를 들꽃처럼 우리나라 독립과 민주화를 이끌어 온 숭한 민초들의 어울림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들꽃자드락과 민주공원 개관 때부터 20여 년간 우리 풀꽃을 품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어준 들꽃나무들, 그리고 민주공원 곳곳에서 들꽃과 함께 일상 속 임표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





## 어린이날 100주년 맞이 민주공원 놀이터

5월 5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어린이날 행사가 민주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연 <어린이날 100주년 맞이 민주공원 놀이터>에는 5,500여 명의 시민이 민주공원을 찾았습니다. 민주공원 장승터부터 넓기람마당, 가리사리마당 등 곳곳에 체험,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스가 마련되었습니다.

장승터 입구에서 어린이들은 미아방지팔찌를 착용하고 민주공원 곳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습니다. 민주공원 부채와 솔방울 장난감도 만들고, 민주공원 캐릭터 주와 사진도 찍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문구를 써보고 키링, 책갈피, 업사이클링 팔찌도 만들어 봅니다. 잠은벌쳐보임방(기획전시실)에서 열린 어린이날 100주년 맞이 민주공원 어린이미술체험전 <나랑 친구할래?>를 찾아 그림 친구도 사귀어봅니다.

작은방(소극장)에서 열린 <호랑이 생일잔치>와 큰방(중극장)에서 열린 <개구리네 한술밥> 공연은 만석을 이루었습니다. 마지막 프로그램인 스트리트댄스에서 어린이들의 댄스 배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두가 지쳤던 시간, 하지만 5월 5일 어린이날만큼은 어린이들이 민주공원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았던 시간! 앞으로도 모두가 밝게 웃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날 축하해요! 🎉





# 예외 없이 어린이였던 모든 어른에게,

정윤주 | 보수동책방글목 어린이도서관 사무국장

##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어린이를 향한 어른의 마음

2022년은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이한 해이다. 이를 기념하며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로 멈췄던 대면 행사의 빛장을 끌고 다채로운 어린이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날의 어린이는 환영의 존재이자 주인공이었다. 곳곳에서 어린이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울렸고, 활기찬 몸짓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오늘 이렇게 환대받았던 아이들이 마주하는 다른 날들은 어떠한가 상상하니 달갑지 않은 근심으로 이어졌다. 바로 여기저기서 내거는 '노키즈존' 안내문이 우려의 시작이다. 아이들은 돌아가는 일상 곳곳에서 말을 듣지 않는, 소리를 크게 지르는, 안락한 분위기를 해치는 천덕꾸러기로 변한다. 그리고 이를 이유로 입장조차 거부당한다. 어린이날 웃으며 즐거운 에너지를 발산하던 아이들이 과연 사고뭉치로 돌변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어른들의 시선이 장소를 따라 달리 변한 것이다. 어른들은 각종 초보를 어린이에 빗대 헬린이, 주린이, 골린이<sup>1)</sup> 등 수시로, 그리고 멋대로 어린이로 둔갑하지만, 어린이와는 한 공간에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 어른들이 몹쓸 번덕을 부리는 것이다.

## 어린이가 없어야 성립하는 어른의 인식

최근 온라인 맘카페를 중심으로 노키즈존/키즈존 소셜 지도(social map)가 빠르게 공유되었다<sup>2)</sup>. 애당초 아이가 들어갈 수 없는 노키즈존과 아이와 가도 괜찮은 키즈존을 지도에 표시하여 식당과 카페에 첫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공유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노키즈존/키즈존 소셜 지도에 접속하여 우리 동네를 펼쳐보았다. 지도에는 이름만 들어도 '아, 거기!' 하고 알 만한

카페들이 노키즈존으로 찍혀있었다. 힐링을 위한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노키즈존의 밀도는 높아졌다. 예상할 수 있듯이 노키즈존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이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 꼭 필요한 정보라며 기뻐하는 맘카페 회원의 댓글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가고 싶은 곳으로의 여행이 아닌, 갈 수 있는 곳으로의 여행이랴! 세련되고 분위기 있는 카페, 평온하고 조용한 식당을 위해서 어린이는 있으면 안 되는 방해물이 된 것이다. 역사 속에 자행되었던 차별을 위한 분리 정책이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다.

## 노키즈존, 어린이를 향한 분명한 차별

노키즈존에 찬성하는 이들은 영리 활동을 하는 영업장에서 수익의 최대치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방침을 세우든지 주인의 자유이자 재량이라고 주장한다. 덧붙여 '내가 겪은 어린이 진상 썰같은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소란이 얼마나 불편을 주는지 피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어린이라는 약자를 대하는 권력을 가진 어른의 입장이 참 잘 드러난다. 아이들이 '어른들은 너무 진중해요, 좀 더 즐겁게 노세요.' '어른들은 불편하

1) 헬스 초보를 헬린이, 주식 초보를 주린이, 골프 초보를 골린이라 부른다. '-린이'는 어린이 차별적 용어이다. 미숙하고 서투른 존재로서 어린이를 대상화한다.

2) <https://www.google.com/maps/d/viewer?mid=1XNvlhjVsrQFtelWfLapc76MiJ9c&ll=35,77521450470591%2C129,37177907876807&z=7>

니 이곳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요.'라며 행동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을까, 결국 일방적으로 어른들이 어린이를 향해 행동을 강제한다는 사실을 떠올려본다. 나의 편의를 위해 나보다 약한 이들의 행동과 자유를 통제하는 일, 폭력의 정의는 따로 있지 않으며 차별에는 이유가 없다. 노키즈존은 분명한 차별이자 폭력인 것이다.

더불어 이 차별은 어린이라는 사회의 구성원을 오롯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린이가 어떤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서툰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건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서이다. 하물며 어른들도 낯선 공간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어색하여 주눅이 들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공간과 상황을 경험하고 다른 시민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기회가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현상은 어린이들이 시민으로서의 질서를 체화하기 전에 존재 자체를 이유로 거부당하는 경험을 쌓아갈 뿐이다.

### 환대가 불러오는 변화


어린 시절 우리 동네 아이들은 동네의 서점, 슈퍼, 부식가게를 놀이터 삼아 술래잡기, 숨바꼭질을 하며 놀았다. 특히 서점은 동네 아이들의 메인 아지트이기도 했는데, 뛰어놀다 지칠 즈음엔 서점의 책을 꺼내들어 여기저기 앉아서 읽어대곤 했다. 미처 다 읽지 못한 책은 중간에 책갈피를 끼워놓고 다음 달 다시 와서 읽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쉽다. 무개념 진상! 발칙한 아이들! 하지만 그 시절 우리는 단 한 번도 서점 사장님으로부터 혼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이 책이 더 재미있다고 책을 추천받거나 책이 쓰러질 만한 위험에 대한 안내를 받았을 뿐이었다. 환대와 포용의 마음이 공간에 따라 달리 있을까. 아이들의 서툰 행동이 아니라 어른들의 여유지 않은 마음의 문제는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근육 발달이 이뤄지고 있는 아이들은 뜻대로 목소리의 높고 낮음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가만히 있기보다 에너지를 분출시키며 뛰어노는 것이 더 좋은 아이들이 있다. 세상을 만나고 알아가는 일은 아이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그리고 모두를 환대하자고 이야기하고 싶다. 시끄러운 아이를 만나 나의 일상을 방해받은 날이 아니라 신나게 노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준 날 혹은 관용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지

켜본 날로 만들면 어떨까. 그런 날은 스스로도 아이들에게 멋진 어른의 모습을 보여준 날로 자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다.

### 예외 없는 모두를 향한 환대

노키즈존 차별에 저항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미래 사회에 어떤 가치를 둘 것인지 투영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혐오를 겪고 자라난 아이들은 혐오의 논리를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다른 이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할지도 모른다. 혐오와 차별은 질서의 댐에 균열을 내는 행위이다. 혐오와 차별이 이어진다면 이내 곧 댐은 무너져 우리를 덮치게 될 것이다. 우리 동네에는 노키즈존에 이어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유스존도 생겨났다. 다음은 누구일까, 나는 절대 아니라고 감히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노키즈존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의 여론은 가게 사장의 압박함에 대한 원망 혹은 훈육의 책임자인 보호자의 탓으로 돌아가기 일쑤이다. 혐오와 차별의 원인이 개인으로 지목되면, 해결의 방식도 개인에게 국한되고 만다. 아이들을 단속하고<sup>3)</sup> 문제가 될 만한 곳은 피해 다닌다. 서로 당신의 잘못을 인터넷에 올려 수치를 주고 공론화를 시키겠다고 욱박지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노키즈존은 어느 날 시작된 어린이에 대한 혐오가 아니다. 곳곳의 약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의 포자가 퍼져나가며 어린이에게 내려앉은 것이다. 노키즈존을 만들어낸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구성원 모두가 소외 없는 환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언젠가 어린이였던 모든 어른에게 마지막 질문을 놓고 부족한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1923년 발표된 「어린이 해방 선언문」은 소년 운동 기초 조건으로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고 들고 있다. 이로부터 100년이 지났다. "어린이를 완전한 인격으로 대하여 예우하고 있나요?" 

3) 아이들에게 이루어지는 어른들의 언행은 돌봄이기보다 단속에 가깝다.

## 무임승차

김태훈 |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예전의 한 일화를 이야기하려 한다. 나는 장애인자립 생활센터에서 일하며 함께 일하는 장애인 활동가와 외근 나가는 일이 자주 있었다. 어느 날 지하철로 이동해야 했고 같이 외근을 나가는 장애인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였다.

지하철로 내려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고,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나는 3명의 어르신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갑작스럽고 당혹스러운 일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어났다. 어르신 한 분이 허를 찌듯 하시며 “아이고 세상 참 좋아졌지, 네같은 아들도 밖에 돌아 댕기고 얼마나 좋냐.” 하였다.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까지 내려가는 30초도 안 되는 그 시간이 나는 너무나 길게 느껴졌고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이런 일은 흔한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눈치였다.

그렇다. 세상은 예전보다 좋아진 것은 맞다. 10년 전, 20년 전보다는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도 많이 생겼고 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도 이제는 흔히 볼 수 있을 만큼 거리를 다니고 있다.

하지만 나와 함께 외근을 나가던 장애인이 그런 말을 들으며 나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되지 않았고, 좋아졌다는 그 엘리베이터도 장애인들의 오랜 투쟁의 결과물이란 걸 알고 있는 나로서는 하루 종일 마음이 좋지 않았다.

한 가지 일화를 더 이야기하고 싶다. 한 술자리에서 정치인이 있었고 그 정치인은 계속되고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 시위에 대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러한 시위(투쟁) 방식을 잘못된 시위 방식이라고, 시위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시위하면 시민들에게 지지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 지금까지 장애인 이동권투쟁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장애인이 목숨을 잃었는지, 지금의 투쟁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일으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장애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시민이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기를 바랐다.

위 두 가지 일화를 이야기한 것은 우리 일상에서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장애인의 권리인 이동권에 대해 세상이 참 좋아졌으니 같은 말로 동정과 시혜적 태도로 많이 해주었다고 하는 인식을 말하는 것이며, 한 정치인의 이야기는 정치인은 복잡한 사회구조와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사람임에도 문제해결에 대한 접근보다는 장애인의 이동권 시위의 방법과 방식을 가지고 그 투쟁방식이 잘못되었고 시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며 시민과 장애인은 갈라져 있다고, 시민을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나는 이해하였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과격하거나 폭력적인 시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나도 생각한다. 그러나 시위의 목적은 본래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서라도 그 내용을 알리는 데 있다는 주장에 일정 수용이 필요하다.

그에 대한 시민의 지지는 시민의 몫이다. 정치는 여기에 대해 답해야 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협의의 공론장으로 끌어내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난 몇 개월간 지금은 여당이 된 공당의 대표가 장애인의 이동권 시위에 대해서 비판적 언사와 장애인, 비장애인을 갈라치기를 하는 언행을 하며 사회의 큰 관심사가 되었다. 여당 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시위는 '시민 출근길을 볼모'로 잡아,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시위가 특정 정권에서는 하지 않고 있다가

였다. 이후 장애인 단체와 인권단체들이 모여 장애인 이동권 연대를 조직하였고 그들의 주장은 단순하고 명료하였다. "중증장애인이 집과 시설을 나와 공부하고 일하려면 이동수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 이동수단이 목숨을 앗아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동의 자유가 있는 사람에게 국가는 이에 대해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장애인 이동권투쟁은 어제오늘 일어난 것은 결코 아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이어져 왔으며 그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법과 제도는 만들어 놓았지만 예산이 없어 아직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대답이었다. 법, 제도, 정책이 있어도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허구와 허상에 불과하다.

장애인과 노약자는 지하철을 이용할 때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교통약자를 배려한 국가의 정책 제도 중 하나이다. 그러면 다시 보자. 지금처럼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로 이동하고 턱이 없이 안전하게 이동하는 대중교통이 과연 장애인만을 위한 것인가? 답은 아니다. 장애인들의 지금까지의 투쟁의 결과에서 나온 법·제도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투입되어 더 많은 시민이 이를 이용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나. 지금의 지하철과 대중교통을 불편 없이 이용하는 비장애인 시민들이야말로 무임승차하여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에서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자유로이 이동하며 공부하고 일하며 살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다. 그 속에 장애인도 당연히 국민이다. 그러면 동물의 왕국이 아닌 나라이니 평범한 입장을 사는 시민, 평범한 입장을 방해하는 장애인으로 갈라치기하는 혐오의 이야기는 그만하고,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다하기를 바란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진행 중인 장애인 이동권 시위 SNS라이브방송 캡처. 장애인들이 지하철에 타고 내리기를 반복한다. 영상에서는 시위대를 향한 욕설과 힘에 '연방한 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고함'이 들린다.

새 정부가 들어서니 그 시위의 형태가 더 강해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는 장애인의 이동권투쟁에 대한 역사를 전혀 모르고 장애인과 시민을 구별 지어 가르는 아주 악의적인 언사라고 말하고 싶다.

장애인 이동권투쟁의 역사는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사고로 당시 3급 장애가 있었던 할머니의 사망 사건으로 촉발되었다. 대중교통인 지하철이 장애인에게는 이용하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교통수단이 되어 버

## 소설가에게 기억과 기록이란

배길남 | 소설가

### “소설가에게 기억과 기록이란...”

소설가 길남 씨는 원고를 쓰기 전 자신에게 주어진 주제를 껌 찹듯 씹어보는 버릇이 있다. 단물이 쪽쪽 빠질 때까지 씹다보면 주제에 맞아떨어지는 단상이나 경험들이 “나 여기 있소.” 하며 손을 들고 나타나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찾아낸 재료들은 맛깔스런 미시여구의 양념에 섞여 지지고 볶이며 새로운 글로 탄생한다. 물론 한방에 끝나는 법은 없다. 완성된 요리, 아니 작품은 퇴고의 과정을 거치며 수십 차례 읽고 또 읽힌다. 이 과정에서 요리 뜯기고 조리 뜯긴 작품은 무럭 무럭 자라나는 법이다. 그러다 더 이상 쳐다 보기도 싫을 정도가 되면 작품은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완성된 작품, 그것은 작품이 소설가의 손을 이미 떠났다는 얘기이다. 그 순간부터는 아무리 창작자인 소설가라 할지라도 하나의 독자로서 기능할 뿐이다. 작품은 자신만의 가치로서 자생력을 가지고 독자들을 만나는 것이다. 단 하나의 독자를 가질 수도, 수천 수만의 독자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각기의 독자들이 내놓는 각기의 해석과 감상이다. 이른바 작품의 가치가 매겨지는 단계이다. 작품은 이제 자신만의 에너지를 가진 생생한 유기체로 거듭나는 것이다...

“아이고 머리아...”

여기까지 일필휘지 키보드를 갈기던 소설가는 갑자기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싼다. 어제 마신 술이 아직 해독이 되지 않은 모양이다. 아무리 그리하여도 어왕 시작한 창작의 순간 아닌가? 지금 멈출 수는 없다. 소설가는 위의 과정에서 거론됐던 ‘단상이나 경험’을 ‘기억’이란 키워드로 바꾸어보기로 했



자유평화로 59번길 39

다. 어마네! 그러니까 ‘완성된 작품’은 즉시 ‘기록’이란 키워드로 교체가 된다. 그렇다. 기억을 기록으로 바꾸는 작업은 만만한 일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아니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을 진행시킨 소설가는 문득 어제 찍은 사진이 생각나 손전화를 들여다본다. 첫 번째 사진에는 낯을 대로 낯은 쓰레트집 하나가 자유평화로 59번길 39란 주소를 붙이고 등장한다. 소설가의 가슴이 잠시 요동치더니 눈가가 살짝 시큰하다. 바로 그곳은 2년 전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집이다. 소설가 길남 씨는 잠시 한숨을 내뿜고는 어제의 다른 사진들을 확인한다.

기억과 기록을 떠들다 말고 “갑자기 이게 뭘 개소리야?” 라고 지청구를 주실 독자가 계시다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란다. 이제부터 소설가가 왜 술이 안 깨었는지, 갑자기 또 댜 글뭇 타령인지 설명해 드리려 하나까...

## 실전! 기억에서 기록으로

소설가 길남 씨는 어제 한 선배의 자녀 결혼식에 갔다가 우연히 미스터 조를 만나게 됐다. 한 신문사 문화부의 터줏대감인 그는 식사 중 범일동 스토리텔링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었다. 외갓집에 대한 추억과 그 주변의 기억으로 <썩은 다리 - 세 번의 눈물>이란 성장소설을 썼던 길남 씨로서는 듣는 것보다 입이 근질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소맥 세 잔을 거꾸 나누며 얘기를 나누던 중 결국 불꽃이 튀고 말았고, 두 사람은 당장 뷔페를 박차고 나와 범일동 시민회관으로 나서게 된다.

시민회관 앞 광장에서 미스터 조는 이런 질문을 했다.

“여기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었던 거 알고 있습니까? 사실 저도 여기 살진 않았고 어릴 때라서 기억이 없거든요.”

이런 된장...! 소설가는 탄식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알아듣는 순간 ‘옛날 사람이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찌하랴? 그게 사실인 것을...’

“예, 초등학교 시절까지 여수 고모댁이나 먼 친척 집 갈 때 거기서 잤었어요. 나중에 지하철 생기고 85, 6년쯤 저기 사직동 부산백화점 쪽으로 이전했을 걸요.”

미스터 조의 눈빛이 평하고 빛난다.

“제가 여기 범일동, 조방 앞을 취재하다 보니 이 동네는 버스터미널을 빼면 이야기를 진행할 수가 없더라고요. 교통의 중심이 되다 보니 사람과 물자가 밀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시장, 자유시장, 평화시장, 중앙시장 등등 시장이 발달했을 것이고, 또 대도시로 각지의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곳이다 보니 음식점이 엄청나게 들어섰을 것이고, 그러니까 혼수나 예물 가게가 가득 찰 수밖에 없었을 테고...”

“탁월한 분석인데... 그보다 시장이 더더욱 발전했다는 분석이 어떨까 싶습니다. 진시장의 포목은 조선방직 때부터 유명했고, 자유·평화시장도 한국전쟁 때 피란민들이 자리잡으며 발달했던 공간이니까요. 심지어 이 부근엔 공민학교도 있었어요.”

“아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범일동 취재에 그런 틈새가 있어요. 이걸 메꾸려면 몸으로 직접 부딪쳐야 되는데...”

미스터 조가 상긋 웃으며 소설가의 눈치를 살핀다.

“행님은 다 제책이 있었구마, 알았어예. 그 살짝 빠진 틈새들은 제가 다는 몰라도 약간은 압니다. 인자부터 저하고 동구·진구·남구 섞어서 썩은 다리 주변으로 돌아보십시


더.”

두 사람의 범일동 탐방, 아니 썩은 다리 주변 탐방이 이렇게 시작했다. 그들은 시민회관에서 동천을 끼고 썩은 다리로 갔다가 다리를 건너 남구 문현동 쪽으로 갔다 돌아올 것이다. 남구 쪽엔 예전 범8동이던 소설가의 외갓집과 공동묘지 거리가 나타날 것이다. 닭곱창으로 유명한 함안집 부근의 좁은 골목에는 다닥다닥 붙은 일명 나래비집들이 줄을 서 있고, 그 줄을 따라가다 보면 다시 동천이 흘러갈 것이고... 오른편으로 금융단지 63빌딩이 그 위용을 자랑할 것이고, 중앙시장을 둘러보다 보면 조방 떡볶이에 대운 침을 한 번 흘릴 것이고, 조금만 더 걸으면 이제 몇 집 남아있지 않은 옥상마을과 이 마을을 머리에 이고 있는 중앙시장청과부 건물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옥상마을을 이고 있는 중앙시장청과부 건물

소설가 길남 씨가 기억에서 캐어 올렸던 이 모든 탐방루트는 소설 <썩은 다리>나 로컬에세이 <하하하 부산>이란 책으로 기록해 두었다. 하지만 이런 결과물조차 다시 4~5년이 지나 새로운 기억으로 돌아와 있는 지금...


5월의 맑았던 어느 오후, 범일동과 조방 앞의 이야기를 새로 기록하려는 미스터 조는 그날 취재의 기억을 기록해 둘 것이다. 소설가는 슬며시 기분이 좋다. 미스터 조의 새로운 기록 작업에 동참한 것도 좋았지만, 그날의 기억이 이렇게 독자 여러분이 읽고 계시는 현재의 글로 새로 탄생했기 때문이다. 하나의 기록이 또 한 번 남겨지는 순간이다. 

## 처음 켜던 촛불을 기억하며 - 효순이 미선이 사망 20주기

2002년 6월 13일, 미군 장갑차에 치어 중학생 신효순 양과 심미선 양이 사망했습니다. '효순이 미선이를 추모하는 수많은 부산 시민들이 같은 해 11월 22일 서면에 모여 촛불을 처음 밝혔습니다. 두 소녀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는 단순한 집회로 시작되었던 촛불 행렬은 미국이 사고 책임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반미시위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은 '대한민국에서의 미국 군대 지위에 관한 협정'인 '소파(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며 다시 거리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켜진 촛불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집회, 시위였습니다. 20년이 지나는 동안 촛불은 우리 사회에 큰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빨간집과 함께 8월 31일(수)까지 시민들이 함께 들었던 촛불의 정신을 기리고, 흩어져 있는 부산 시민들의 소중한 기록을 한 자리에 모으기 위해 수집 사업을 진행합니다.

부산 촛불집회 관련 사진, 영상, 홍보물, 피켓, 포스터, 깃발, 일기, 편지, 메모, 작품, 간행물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아울러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당시의 기억을 듣는 구술인터뷰도 진행합니다. 여러분이 기증하신 자료는 민주공원 부속건물(사료관)의 중요한 기록물로 보존됩니다.

20년 전 서면에서 처음 켜던 촛불을 기억하여 부산 시민들의 기억을 모아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더 나은 민주주의 세상을 만드는 데에 함께해주세요시길 바랍니다. 



민주공원 소장 <2002년 어중생 사망 사건 항의, SOFA 개정 요구> 촛불시위 관련 민주공원 놀람쳐보임방(상설전시실) 중 촛불시위 코너



민중공헌 소장 <2002년 여중생 사망 사건 항의, SOFA 개정 요구> 촛불 시위 관련 물품들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 20주기

## 부산지역 촛불 사료 및 기억 수집 공모

2022.05.18.(수) - 08.31.(수)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으로 당시 여중생이었던 고 신효순 삼미선 양이 안타깝게 떠난 후 올해 20주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부산에서는 11월 22일 첫 촛불집회가 주디스태와 앞에서 열렸고, 12월 31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촛불을 들었던 그 정신을 기리고, 흩어져 있는 부산 시민들의 소중한 기록을 한 자리에 모으기 위해 수집사업을 진행합니다.

### 수집 대상

- ① 부산 촛불집회 관련 사진, 영상, 홍보물, 파켓, 포스터, 깃발, 일기, 편지, 메모, 작품, 간행물 등 다양한 자료
- ② 촛불집회 참여 당시의 기억 구술인터뷰

### 제출 방법

온라인 제출  
<https://naver.me/x0GsZfUx>



### 참여자 예우 및 시상내역

- 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는 인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② 기록물 분량과 사료적 가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상합니다.

발표: 2022.09.16.(금)

- 1등(1명) 2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 2등(10명) 3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 3등(50명)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여러분이 기증하신 자료는  
민주주의 사료관의 중요한 기록물로  
보존됩니다.

iiarchives@gmail.com  
070-7309-1947  
www.ohminju.or.kr

공부산민주형평기행사업부

X  
민주평화당

## 〈우크라이나 & 평화展〉

만화, 웹툰을 배우는 대학생들의 〈우크라이나&평화展〉이 4월 12일(화)부터 24일(일)까지 민주공원 2층 로비에서 열렸습니다. 영산대학교 웹툰학과 학생과 교수 52명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만평 40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후원 협약식



4월 11일(월), (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에서 민주공원을 방문하여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20,000,000원(이천만원)을 전달해주셨습니다. 의미 있는 후원을 실천해주신 (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에 감사합니다. 지난해 (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에서 전해주신 사회공헌 기금으로 민주공원 들꽃자드락을 조성했습니다. (주)상지엔지니어링과 함께 조성한 민주공원 들꽃자드락에서 이름 모를 들꽃처럼 우리나라의 독립과 민주화를 이끌어 온 숭한 민초들의 어울림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MOU 체결식

4월 13일(수) 민주공원과 (재)부산문화회관이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장은 민주공원에서 협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상호협력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연·전시·교육 프로그램 상호 교류 및 홍보, 회원 간 상호 혜택 및 프로그램 교류, 우수작품 공연 및 전시에 양 기관 회원 초대, 양 기관의 기획 공연 및 전시 콘텐츠 공동 개발 및 지원,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원을 위한 (재)부산문화회관 전시, 공연 초대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도록 힘쓰겠습니다.



## 4·19혁명 희생자 위령제

4·19혁명 희생자 위령제가 4월 18일(월) 오후 3시 4,19광장 내 4월민주혁명 희생자 영령봉안소에서 열렸습니다. 위령제는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4·19혁명희생자유족회 부산광역시지부에서 함께 준비합니다. 이재동 4·19혁명희생자유족회 부산광역시지부장의 제문 낭독을 시작으로 김용성 4·19민주혁명희 부산광역시지부장, 장승희 부산광역시 총무과장 등 참석자들의 헌주와 제배, 임성현 부산지방보훈청장 추모

사가 이어졌습니다. 1961년 시민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4월민주혁명희생자위령탑 건립 당시 국제신문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배재한 국제신문사 사장이 인사말을 이어 갔습니다. 배재한 사장을 비롯한 국제신문사 관계자들은 김종기 민주공원 관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민주공원 부속건물(사료관) 건립 부지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 제62주년 4·19혁명 기념식

제62주년 4·19혁명 기념식이 4월 19일(화) 오전 10시 4,19광장 내 4,19민주혁명희생자 위령지 앞에서 열렸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보훈청 등에서 참여했으며 헌화와 분향, 4·19혁명 경과보고, 기념사, 추모시 낭송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행봉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최갑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과 함께 헌화와 분향을 했습니다. 부산시립합창단의 추모합창 공연 후 4·19의 노래를 제창하며 기념식을 마쳤습니다.



## <오월어머니의 노래> 공연

5월 14일(토) 오후 4시부터 <오월어머니의 노래>가 민주공원 큰방(중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에서 이어 열리는 <오월어머니의 노래>는 1980년 이후 투사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오월어머니들이 당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노래로 전하는 공연입니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먼저 떠난 이를 그리워하고 그 기억이 잊히지 않도록 노력하며 평생 투쟁의 길을 함께 걸어온 열다섯 분의 삶이 음악으로 펼쳐졌습니다. 민주공원 유튜브 채널 ([www.youtube.com/민주공원](http://www.youtube.com/민주공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동아시아민주인권평화인권네트워크 정례회의

5·18민주항쟁 42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5월 17일(화), 광주에서 동아시아민주인권평화인권네트워크 정례회의가 열렸습니다. 동아시아민주인권평화인권네트워크에는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5·18기념재단, 제주4·3평화재단, 노근리국제평화재단,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국내 네트워크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례회의에는 이행봉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종기 상임이사 겸 부산민주공원 관장, 이동일 사무처장이 참

석했습니다. 지난해 제14대 5·18기념재단 이사장직을 맡아 한평생 5·18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에 힘써오신 故 정동년(1943-2022, 5, 2) 이사장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 故 김형률 17주기 추모 모임

5월 28일(토) 민주공원 정승터에 있는 김형률 추모비 앞에서 고인의 17주기 추모 모임을 조촐하게 가졌습니다. 박광주 부산대 명예교수 부부, 정귀순 부산인권물빛뜸 파랑 대표, 정지숙 이주민과함께 상임이사, 김옥숙 작가, 전진성 부산교대 교수 등이 함께했습니다.

"형률씨, 우리와 마지막으로 만난 지 벌써 17년이 흘렀습니다. 벌써 17년입니다. 당신이 미처 고민해보지 못했던 핵발전소는 핵무기보다도 훨씬 공포스럽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더 그립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당신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당

신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당신을 대할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당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김형률, 우리에게 당신은 희망과 부활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표와 책임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추모사 중)

**민주시민의 특별한 기부**

**당신이 민주주의입니다.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에 함께 걸어주세요!**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민주화운동을 기념·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기념사업, 민주시민교육, 대중문화예술, 기획전시, 체험활동사업에 쓰입니다. 후원회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홈페이지([www.ohminju.or.kr](http://www.ohminju.or.kr)) 또는 민주공원 홈페이지([demopark.or.kr](http://demopark.or.kr))에서 하실 수 있으며 QR코드를 스캔하시어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는 회원사업 담당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 전화 : 051-790-7473
- ◆ 이메일 : [regisseur@demopark.or.kr](mailto:regisseur@demopark.or.kr)



**〈특별한 기부, 특별한 혜택〉**

1. 회원 감사증서 발송
2. 가입 후 3만원 상당의 가정용 반려나무 세트 택배 발송
3. 회원의 이름으로 숲 조성을 위한 활동 진행
4. 행사 및 교육 활동 우선 알림과 혜택
  - ▶ 〈민주달력〉, 뉴스레터 〈마루누리〉 발송
5. 소식지 무료 발송(연 4회)
6. 부산문화회관 전시와 공연 특별 할인가 혜택
7. 회원 간 교류 활동
  - ▶ 역사기행, 체험프로그램 등
8.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 성찰과 전망 제35호 발간

[새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설 민주주의사회연구소에서 「성찰과 전망」 35호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호 특집은 수년간 한국사회의 주요한 쟁점인 청년, 공정, 전대 문제를 다룬 "공정은 어떻게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었나", "2022년 2030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둘러싼 장면들"과 6월민주항쟁 35주년을 맞이하여 "부산지역 6월민주항쟁의 연구 현황과 과제"를 실었습니다. 특별기고문 "미선이와 효순이의 나라는 없다", 21세기를 비추는 사상과 사상이 시리즈 세 번째 "발리바르의 반폭력의 정치", 연재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그리고 문화리뷰의 폭을 넓혀 대중음악을 소재로 한 "BTS가 투표를 한다면, 음악과 철학, 그리고 정치 사이" 등 의미 있고 흥미로운 글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찰과 전망」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민주주의사회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 문의 [www.narak.kr](http://www.narak.kr) | ☎ 051) 463-2240

## 동구 다행복마을학교 인문철학분야 '여기저기'

마을학교 <여기저기>는 로봇을 만드는 박사님과, 그림을 그리고 연극을 하는 예술가, 그리고 복지사가 모여, 나와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고 교감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배웁니다. 마을을 탐정처럼 다녀보기도 할 것이고, 부산비엔날레 탐방도 가보고, 로봇의 세계도 살펴보면서, 약한 사람들과 '재밌게' 함께 사는 방법들에 대해 활동도하고 즐겁게 이야기도 나누려 해요.

- 시간 : 매주 화요일 4시 30분 시작(5월 24일 시작)
- 장소 :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동구 초량동(중앙대로 267) 신동빌딩403호
- 참여대상 : 12~19살
- 신청링크 : <https://nuly.do/ig6V>
- 문의 : [minjuedu@hanmail.net](mailto:minjuedu@hanmail.net), 010-4949-7454



### 프로그램 소개

- 송성진 <마당발 프로젝트>  
 - 일시 : 5월 24일, 31일/ 6월 7일, 14일
- 김연주 <몸으로 말하고 함께 느껴요>  
 - 일시 : 6월 21일, 28일/ 7월 5일, 12일
- 김일연 <내 옆의 로봇, 안드로이드, 사이버보>  
 - 일시 : 8월 23일, 30일/ 9월 6일, 13일
- 오우석 <관대보다 완대>  
 - 일시 : 9월 20일, 27일/ 10월 4일, 11일
- 문지영 <커다랗게 포옹하기>  
 - 일시 : 10월 18일, 25일/ 11월 1일, 8일



## 우수작품 초청기획공연 <우리 이야기 - 드루와 시크릿 미용실>

- 일시 : 7월 16일(토)
- 장소 : 민주공원 작은방(소극장)
- 내용 :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는 시크릿미용실에서 펼쳐지는 수다 한마당을 풀어 보여주는 작품



## 6월민주항쟁 기념전시 <민중미술 2022 - 출렁 일렁 꿈틀거리는>

- ◆ 섹션 1 <민중미술 소장작품전>
  - 내용 : 민주공원 소장 민중미술 작품 45점 전시
  - 일시 : 5월 21일(토) ~ 7월 31일(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매주 월요일 휴관**
  - 장소 : 민주공원 작은펼쳐보임방(기획전시실)
- ◆ 섹션 2 <민중미술의 현장/식민지구 2022 - 침묵의 바다>
  - 내용 : 환경, 생태, 생명을 주제로 한 지구예술인의 예술 발언
  - 일시 : 8월 20일(토) ~ 10월 23일(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매주 월요일 휴관**
  - 장소 : 민주공원 작은펼쳐보임방(기획전시실)



## 부산 시민의 기록물을 수집합니다

나의 기억이 우리 모두의 기록으로! 2024년 민주공원 부속건물(사료관)이 문을 엽니다. 부산 시민의 기억 저장소가 될 민주공원 사료관 개관을 앞두고 시민 여러분의 기록물을 수집합니다. 기억이 기록으로, 기록이 기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051-790-7483

# 2022 부산민주공원 민주공원 체험프로그램

역사  
체험



## 민주공원 스토리투어

공원해설사와 민주공원의 다양한 공간을  
둘러보는 역사문화탐방

- 대상 : 10세 이상 개인 및 단체
- 기간 : 2022년 4월~11월
- 시간 : 10:00/11:00/13:00/14:00/15:00
- 모이는 곳 : 민주항쟁기념관 1층 입구

생태  
체험



## 민주랑 숲이랑(숲체험)

시니어숲해설사와 함께 민주공원과  
인근 숲을 거닐어보는 숲 체험

- 대상 : 전 연령대
- 기간 : 2022년 4월~11월
- 시간 : 10:00/11:00/13:00/14:00
- 모이는 곳 : 민주공원 창송터

역사  
체험



## 민주항쟁기념관 전시해설

민주항쟁기념관 상설전시실 늘필체보임방을  
중심으로 한 전시해설 프로그램

- 대상 : 10세 이상 개인 및 단체
- 기간 : 2022년 5월~11월
- 시간 : 10:00/11:00/13:00/14:00/15:00
- 모이는 곳 : 민주항쟁기념관 1층 입구

생태  
체험



## 민주랑 열매랑(어린이 숲체험)

시니어숲해설사와 함께 민주공원과 인근 숲의  
나무와 열매를 살펴보는 어린이 숲체험

- 대상 : 10세 이상 개인 및 단체
- 기간 : 2022년 4월~11월
- 시간 : 10:00/11:00/13:00/14:00
- 모이는 곳 : 민주공원 창송터

- 🍀 신청방법 : 선착순 온라인 예약(demopark.or.kr), 현장 접수
- 🍀 예약기간 : 프로그램 희망일의 30일 전~5일 전
- 🍀 현장접수 : 민주항쟁기념관 상설전시실 안내데스크 접수
- 🍀 민주항쟁기념관 휴관일에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 🍀 체험문의 : 051-790-7416

민중미술 2022

# 꿈 꿈 꿈 KMU

## 꿈틀거리는

6월민주항쟁 35년 기념 전시

주최  문화재단

주관  문화재단  문화재단  문화재단  문화재단

문의 051-790-7414

### SECTION 01

민중미술 소장작품전

## 근대! 근대!

민주공원 소장 민중미술 작품으로 보는 한국근현대사

2022. 5. 21.(토) - 7. 31.(일) 10:00-17:00

민주공원 기획전시실 | 월요일 휴관

### SECTION 02

민중미술의 현장 / 식민지구 2022

## 침묵의 바다

환경, 생태, 생명 주제 지구 예술 발언

2022. 8. 20.(토) - 10. 23.(일) 10:00-17:00

민주공원 기획전시실 | 월요일 휴관